

# 건설공사 외주화 과다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50억→70억 미만 확대

##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 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첩첩이 소규모 공사의 일괄 비율 이십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직접 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



한 경우에도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률 가산해준다. 원질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64%로 올라간다.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집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감독자를 보유하면 시공능력평가 불에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 ‘일감 보릿고개’ 도내 건설사 전국시장 진출

관급 수주 전년비 116억 감소  
“동계올림픽 후 공사물량 급감”  
업체 10여곳 타시도 입찰 추진

강원 향토 우량건설사들이 지역 공공기관의 공사발주량 감소와 도내로 진출한 타시·도 건설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전국 입찰에 뛰어들고 있다.

26일 조달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공공기관을 통한 업계의 수주액은 643억3800만여원으로 전

년동월(759억4700만여원)보다 116억900만여원(15.2%)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계가 공공기관을 통한 시설공사 수주액이 1조4521억여원으로 2017년(1조5263억여원)보다 742억여원(4.8%)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관급공사 수주경기가 악화되는 추세다. 여기에 일부 지역공공기관의 건설공사가 전국단위 입찰로 진행, 타시·도 건설사들의 진입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도내 건설사들이 지역내 일감 감소와 입지가 좁아지면서 타시·도 건설시장에 진출하

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최근 조사한 타시·도 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회원 종합건설사는 춘천의 삼흥과 대양, 원주 덕천산업과 대금종합건설, 강릉의 중미건설과 신화건설 등 10여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춘천 종합건설사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삼흥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1조원 규모의 신분당선 공사에 뛰어들었다. 올해 9월까지 추진될 계획인 평택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공사에도 참여하기 위해 현지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해 진행 중이다.

대양도 충남지역의 관급 도로건설 공사에 나섰다. 경남 진주상가와 인천북항 시설 등 타시·도 민간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릉 중미건설은 타시·도 입찰을 위해 도외 지역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 중이다.

최규남 중미건설 부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도내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발주를 보기 드물 정도로 공사물량이 급감했다”며 “도내 관급공사 수주가 줄어 타시·도 건설사들과 공동으로 수주하는 입찰계약도 눈여겨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관호